

노사정, 노동개혁 해법 찾기 시동 ‘정년 연장’ 사회적대화 재개되나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모색
노사관계·사회적 대화 논의
‘정년 연장’ 등 주요 현안 쟁점
경사노위, 4월까지 결론 도출

노사정이 노동분야 주요 정책 과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간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으나 작년 비상계엄 이후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노사정이 모두 모인 자리는 지난 1월 23일 ‘고령자 계속고용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방안·원하청 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택했다”며 “(전문가들은)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김문수(왼쪽 여섯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생산인구 감소와 양극화, 산업전환의 위기감을 언급하며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개회사를 대독한 류기섭 사무총장은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 신뢰가 빠르게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을 통해 “토론회에는 참석하지만 이것이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작년 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따라 복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3월까지 한국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4월까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 수기자 hys@metroseoul.co.kr

6월부터 ‘지역내총생산 분기별’ 공표

통계청,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

통계청이 오는 6월부터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존의 연간 기준에서 분기별로 쪼개 공표한다.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신속·정밀한 분석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을 주제로 ‘통계청-한은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GRDP는 지역GDP(국내총생산) 통계로 지방 경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다만 그간 연간 기준으로만 작성돼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시의적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통계청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GRDP를 개발했다.

분기별 GRDP 공표가 이뤄지면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간으로도 현행보다 9개월 먼저 속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시계열이 축적

되면 지역 경기의 상승·하강 국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지역 기반 데이터와 지표”라고 말했다. 또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 연간 성장률을 현행보다 9개월 빠르게 제공하는 분기 GRDP를 도입해 시의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응 지원을 위한 통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초저출산과 가계부채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포럼에선 지역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 발표 및 토론회도 진행됐다. 포럼은 ▲균형발전 전략 ▲균형발전 지표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 한도 대출

산업부, 친환경차 보급 이차보전 사업
오늘부터 내달 21일까지 신청서 접수

정부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원 한도로 최대 8년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2025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월27일~4월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차 전환 투자(투자 계획 중인 기업도 포함)에 나서는 중견·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상품과 연계해 기업 부담 이자를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목적은 친환경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M&A, R&D로 업체 당대출한도는 100억원이다. 중소기업

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를,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최대 8년간(R&D자금은 최대 5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3200억원 상당의 기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의 은행 선택권 확대를 위해 취급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개에 광주은행, 제주은행 2곳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20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6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분야별 지원 비중은 시설자금 49개(71%), 연구개발자금 19개(28%), M&A 자금 1개(1%)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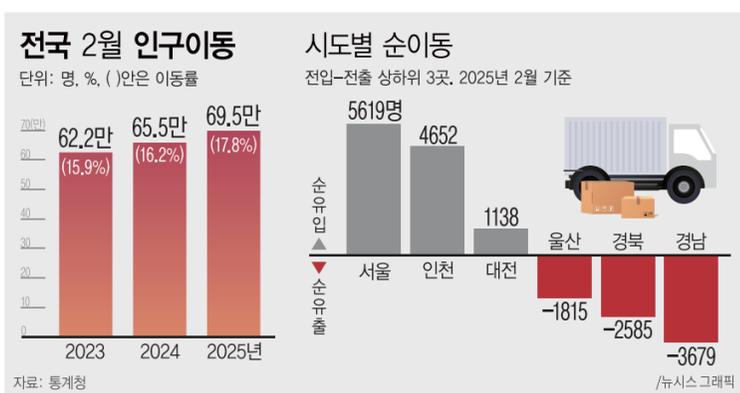
산업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결과 은행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신축아파트 입주에 인구 이동 69.5만명

통계청,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동자 수 2021년 이후 4년만 최대
인구 순유입 서울 1위, 인천 2위

새 아파트 입주 등이 늘어나면서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최근 4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올해 2월 전국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서울로 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65만5000명)에 비해 4만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2월(+70만6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다 이동이다. 시도별로 서울 지역으로의 순유입이 56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4652명)이 2위, 대전(+1138명)이 3위, 세종(+679명)이 4위, 충남(+569명)이 5위에 올랐다. 반면 경남(-3679명)을 비롯해 경북(-2585명), 울산(-1815명), 광주(-1449명), 강원(-1116명) 등에서는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순유입이 된 것 같다. 대전이나 부산도 일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어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0.7%를 차지했다. 그 외(39.3%)는 시도 간 이동자였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와 시도 간 이동자 수는 각각 5.2%,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1.6%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7.8%)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13.4%)부터는 4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5명으로 1년 전보다 0.5명 증가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월 0.80명에서 올해 1월 0.88명으로 반등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2022년 이후 혼인 건수가 늘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

환경부, 전 세계 19번째 공식 활동

국내에도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팅이전 그룹)이 출범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27일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연합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자연자

본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해 설립됐으며, 1700여 개 금융기관·기업 등이 가입해 있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 환경부 및 31개 기관이 설립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와는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이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한다.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북구 5개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둔 나라가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